

「세계환경의 날」을 계기로 본

政府의 環境保全政策

이 글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청이 마련한
기자간담회 내용을 발췌한 것임. —편집자註—

세계환경의 날 지정경 위 및 배경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각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수세기 전부터 법령등으로 확립하여 왔으나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보전 인식은 최근에 제도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

즉,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과학적으로 제고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보조의 필요성이 높아져 UN은 1968년 UN 총회 결의 제 2398호에 의해 UN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의 했다.

UN인간환경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 UNCHE)는 1972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어 한국등 113개국가 대표가 참가하여 UN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고 “세계 환경의 날” 제정 및 UN환경계획(UNEP) 창설등을 건의했다.

즉, UN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여 환경에 대한 공동인식 증진을 온세계에 권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년의 제 27차 UN 총회는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여 각국 정부와 UN기구들이 범세계적인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의 날」 또는 「환경주간」을 지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날을 전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세미나, 전시회, 캠페인 등의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UNEP집행이사국 피 선을 계기로 환경분야 국제협력증진 방안

우리나라는 지난 '86년 12월 제 41차 유엔총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최초로 주요 유엔기구중의 하나인 유엔환경계획(UNEP)집행이사국으로 피선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

적 지위가 크게 향상됐다.

이를 계기로 우리 청에서는 환경분야의 국제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다국간 협력강화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어 환경보호 활동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및 참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환경관계 주요국제기구, 즉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개발계획(UNDP)등과의 협력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 UNEP활동 강화방안의 하나로 UNEP사무국 및 UNEP본부가 소재해 있는 케냐주재 한국공관에 정부공무원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정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WHO지원사업 이외에도 UNDP 지원자금으로 올 하반기부터 '90년까지 전국 자연생태계 조사 분야와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분야

의 외국전문가를 초청하고, 관계공무원을 해외 연수시킬 계획이다.

양국간 협력강화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선진국과의 환경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환경보호 정책 및 기술분야에서 최고 수준인 미국 환경청과 환경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체결, 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양측은 이미 상호 초안을 교환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미국측안에 대하여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는등 검토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고 양해각서는 올해 하반기에 체결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다.

또한 한·미 양국간 환경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상호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하여 금년 11월 서울에서 한·미 환경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으로 동 심포지움은 환경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상호 이해증진 및 전문지식·정보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본 및 유럽 선진국들과 인력교류, 정보교환, 공동연구등을 통한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황산가스 저감대책

도시내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간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대기오염 저감방안을 강구 추진하였으나 아황산가스의 오염도는 환경기준치를 계속

초과하고 있고 산업의 발전 및 도시의 집중현상, 급증하는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아황산가스의 오염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키 위한 근



본적인 대책으로써 '90년부터는 유류중 함유되어 있는 유황분을 아주 적은 상태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유회사에 '87년부터 점차적으로 중질유 탈황 및 분해시설을 설치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이 계획대로 설치될 경우 현재 방커C유의 유황성분은 1.6-3.5%에서 1.0-1.6%로, 경유의 경우는 0.4-1.0%에서 0.2-0.4%로 생산·보급되며 올림피기간중에는 서울지역에 유황함유량 1.0%의 B-C유가 공급될 계획이다.

'87.2월부터 수도권외 일부지역에 청정연료인 LNG 연료가 공급되고 있으며, 서울의 도심지중의 업무용 빌딩등에도 LNG를 점차 확대 공급하여 서

울지역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를 줄여 나아가 '90년도부터는 세계주요도시의 환경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시설 및 상업시설, 업무용 빌딩등에 대한 저유황유 및 청정연료 공급만으로는 아황산가스

의 오염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주로 가정에서 난방 및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연탄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가정용 연탄사용을 경유 또는 청정연료등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6월부터 건평 40평이상의 중산층과 아파트, 연립주택, 요식업등을 대상으로 연탄사용 억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연탄사용에 의한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줄여 나갈 것이며 이에 필요한 시설 대체등 자금의 융자 지원 방안등을 강구한다.

또한 대도시의 분진 오염도

를 줄이기 위하여 대규모 아적장의 방지시설을 확충하고 건축 공사장의 방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도로청소장비 보강 및 도로포장의 확충,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저공해자동차 및 무연휘발유공급 방안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140 만대를 넘어섰고 앞으로 더욱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다.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인은 자동차 배출가스로서, 급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도심의 대기오염 심화가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저공해자동차를 생산 보급토록 하였다.

'87.7.1부터 포니엑셀, 프레스토, 그랜저, 르망, 프라이드는 저공해자동차로 생산 보급되며, 그 외의 승용차는 '88.1.1부터 전면 저공해 자동차로 생산 보급된다.

저공해자동차는 현행 자동차보다 유해 배출물질은 70-90% 감소시키며, 연료 소모량도 감소시켜 같은 양의 연료로 더 많이 주행할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에는 반드시 무연휘발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무연휘발유는 납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휘발유로서 '87.7.1부터 생산 보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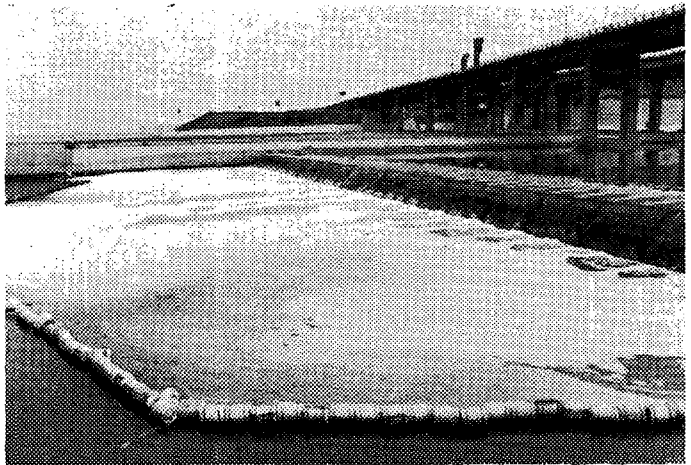
전국하천 정화대책추진

우리나라 하천의 오염상태는 대도시 관류 및 공단직하류 지·하천이 가장 심하고 중소도시 관류 지·하천도 오염이 진행되어 오염의 상태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촌의 소하천도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쓰레기 및 생활용수의 증가, 각종 농약과 비료의 과다사용, 폐비닐 농약 공병등의 방치등 오염요인의 증가로 맑고 아름답던 옛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 그동안의 하천정화대책은 행정구역별로 관주도의 소극적이며, 행

사업을 지양하고 하천의 오염영향권역을 설정, 내륙 236개 권역 임해 11개 권역으로 구분 오염 영향권별로 오염요인, 오염경로, 오염실태등을 파악하여 대책의 기본자료 및 사업효과 평가자료로 활용하며 관련 행정기관은 물론 하천오염에 대한 인식제고로 주민, 사업자 및 각종 직능 및 민간 단체등 모든 오염행위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참여토록 하여

○ 1 단계로는 “내마을 하천 살리기 운동전개”로서 지역주민 홍보계도로 인식을 전환시키고 하천 및 주변청소, 가정정



정적인 형식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일선행정기관의 하천정화의지 미흡과 지방재정의 빈약등에 기인한 것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공간과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87.1.1부터 전국하천정화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 추진방향은 지금까지 하천 상·하류간에 걸친 오염의 경로를 고려하지 아니한 행정 구역단위의 정화

화조 청소, 하천오물투기 방지 등 하천을 정비하고

○ 2 단계로는 “오염물질 자가처리시설의 정비 및 관리철저”를 위하여 가정정화조 개선, 산업체 방지시설 개선, 산업폐기물의 처리철저, 비규제대 상축산폐수처리를 유도하고

○ 3 단계로는 “환경기초 시설의 설치 및 하천환경정비”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쓰레기매립장 설치, 오염우심하천 준설정비등 정부재정의 투자로 이룩되는 환경기초시설등을 설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전국하천 및 연안 수질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 보전토록 한다.

환경관리 모범업체 지정운영

배출시설 업체중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운영하는 우수업체에 대하여 환경관리 모범업체로 지정관리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사기양양과 타 업체에 귀감이 되게 하여 배출시설 운영을 유도하고자 '87년도 환경오염방지 모범업체를 금년 6월 1일 지청별로 선발 추천심의지정한 바 있으며, 지청별 지정업체는 다음과 같다.

지청별	계	서울	부산
지정수(개소)	23	9	5

광주	대구	대전	원주
2	3	3	1

모범업체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며, 방지시설자금을 우선지원함과 우수업체 표창에 우선 추천토록 하는 등의 특혜를 부여하므로써 자율적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산업폐기를 복수전표제 실시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 함으로써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 전체량의 약 88%를 배출하고 있는 200개 대량 배출업소와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과정"을 발생자 발행의 복수전표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87. 6. 1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제도는 환경청에서 대상업소별로 고유번호를 부여, 폐기물을 처리할때마다 폐기물의 종류, 성상, 처리량, 처리예상장소, 운반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등이 기록된 백색, 적색, 청색, 녹색의 4장의 전표를 발행해서 각 처리단계별로 감시센터인 환경지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해안매립지 건설방안

해안매립지 건설후보지

위 치	인천시 및 김포군 인접해안 간척지
면 적	1,100 만평 (3,630 만㎡)
매립가능기간	수도권지역쓰레기 20년이상 매립
서울시경계선으로부터거리	12 km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은 일일 35,000톤 상당으로서 전국 쓰레기 발생량의 5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지를 내륙에서는 더이상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설사 내륙매립지를 건설한다 하여도 수백만평의 국토가 손실되며 매립지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토확장 효과가 있는 대규모 수도권 해안매립지의 조성을 최대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해안 매립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수명 20년 이상의 대규모로 하고 완벽한 설계에 의하여 각종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갖추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매립완료 후에는 농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등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웃끼리 나눈온정 밝아오는 우리사회